

입법취지 살려 청정 대한민국 길 열어야

김영란법 시행



정완
법과대학 교수

입법 전부터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심했고 급기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여부에 대한 심판까지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마침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4개조로 구성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열네 가지 유형의 부정청탁행위 금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무조건적 금지, 관련사실의 신고의무, 범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다.

김영란법 실시는 종래 암묵적으로 행해오던 우리 생활 속의 부정부패 습관에 제동을 거는 가히 혁명적인 조치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 법은 오로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할 뿐이고, 민간인들 사이의 행위에는 제약을 주지 않는다. 다만, 공직자 등의 범위에 공무원 이외에 언론인과 교직자를 포함시켜 수범자의 범위를 넓히는 바람에 위헌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부정부패란 주로 국가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법행위로서 각국은 이를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바탕으로 한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한 개를 건넨 것이 범위안으로 신고된 일은 매우 충격적이다. 누군가와 식사를 하고 싶어도 '이거 괜찮을까?' 라며 자문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변화 자체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혁명적 바람이 불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김영란법의 수법대상자와 관련하여 공무원들의 숫자가 상당하고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4백여만 명으로 숫자가 늘어나며 여기에 초중고 대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를 포함하면 거의 모든 국민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도 일정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숫자예측은

품조차도 허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됐고 많은 국민들이 긴장하며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법 실시에 즈음하여 관청부근의 식당과 주점에 공직자들을 대동한 민간인의 발길이 뚜렷했고 백화점이나 상점의 선물세트가 잘 팔리지 않는 등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던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바꾸는 김영란법 실시, 꾸준한 개선도 필요해

김영란법의 실시는 과거 부정한 청탁과 금품수수로 일처리를 해오던 부류의 사람들을 매우 불편하고 신경쓰이게 만들었지만 부정부패 척결을 간절히 바라던 대다수 국민들에겐 속시원함과 행복을 제공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법의 실시로 대다수 기업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부정한 수단으로 규제를 받지 않으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 나아가 절저히 법률규정을 준수하고 오로지 경쟁력만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지 않으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규정내용이 매우 불분명하고 미흡하다거나 법위반 공직자등에 대한 제재에 있어 형평이 맞지 않거나 하는 등의 문제점만을 지나치게 지적하며 법의 실효성을

을 부정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꾸준히 개선하여 나가면 될 것이고 불분명한 규정에 대하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례 축적을 통하여 점차 해결해 나가면 된다. 아울러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하여 행하는 부정 청탁과 금품수수는 금지하면서도, 반대로 공직자가 행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는 허용하는 문제점도 있으므로 신속히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입법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없는 진정한 청정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추후 김영란법의 적용범위를 더욱 넓혀 언론·사학 뜻지않게 공공성이 강한 금융계·법조계·의료계와 대기업, 시민단체 등도 모두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전체의 윤리기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정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만일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법위반 적발건수가 매우 미흡하거나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 법을 경시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참여마당

안명진(사회학 2014)
경희대 독립언론 준비모임 <경희현재리포트> 편집위원



백남기, 폴리스라인, 후마니타스

백남기는 1947년생의 농민이었다. 20대엔 중앙대학교에 입학했고, 당시의 많은 양심적 지식인들이 그랬듯 치열하게 시대와 대결했다. 역사나 정권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고, 제적과 투옥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민주주의는 시대가 설치한 폴리스라인 너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남기는 또 한 번 폴리스라인을 넘어야 했던 이유는 농민들의 생존과 존엄 때문이었다. 몇십 년 전까지 '농자천하지대본'을 국가적 이데올로기로 삼던 나라라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온 나라가 농민들을 수탈하는데 공모하였다. 이 나라는 맨 처음, 도시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해 강제로 쌀값을 하향 조정했다. "조국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을까. 이어진 "구국의 결단"들은 우루과이 라운드와 FTA였다. 경제성장을 위해 '어쩔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국'과 '경제성장'의 목적에는 언제나 농민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백남기는, 농민이 국가정책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인간의 가치 탐색>에서 배웠던 "모든 인간이 목적으로 대우받는" 황금률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폴리스라인을 넘어야만 했던 것이다. 칸트는 말했지만, 백남기는 실천하였다. 우연찮게도 백남기의 세례명은 '임마누엘'이었다.

"그깟 선 하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으로 넘었던 폴리스라인은 광화문 근처의 차벽 앞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2012년 겨울, 지금의 대통령은 선거에 즈음해 농민들을 위해 쌀 수매가를 현실화 하겠다고 공약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에게 공보물에 적힌 몇 개의 글자들일 뿐이었지만, 백남기와 농민들에게는 단순한 약속 그 이상이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사회는 그가 그토록 바라던 사회, "농민도 목적으로 대우받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말하자면 백남기가 마주했던 그 날의 폴리스라인 저편에는, 모두가 아는 상식과 지켜야 할 약속이라는 우리 사회의 도덕적 최소한이 놓여 있던 셈이다. 그래서 그날도 백남기는 폴리스라인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가 온 삶을 통하여 지켜온 하나의 단순한 신념 때문이었다. "그깟 선 하나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하지만 백남기는 죽었다. 너무나 하루하게 죽었다. 너무나 쉽게 사람을 죽이는 정권이어서, 슬플 겨를도 없이 싸울 채비를 마쳤다. 백남기의 죽음 앞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백남기가 "더 나은 인간, 후마니타스"이기 때문이다. 이윤보다 인간이 먼저인 사회를 만드는 이가 후마니타스가 아니라면 후마니타스는 누구인가. 정권이 멀대로 그은 선 하나에 정의와 평등, 존엄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가 배운 인문주의던가.

백남기가 후마니타스다. 백남기가 인문학이다. 한 평생 반-인간적인 시대와 치열하게 불화했던 백남기가 후마니타스다. 백남기의 죽음이 묻는다. 강의실에서 인문주의를 암기할 것인가, 캠퍼스 밖에서 인문주의자일 것인가. 확신하건대, 후마니타스는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이다. '그깟 선 하나에 존엄과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백남기의 이름으로, 거리에서 우리는 인문주의자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